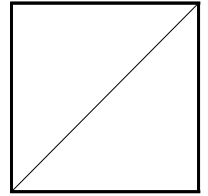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6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7. 22. (제 14 차)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7. 22.

## 1. 의결주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비증권(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의2호, 제29호, 제34의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3호  
 「(구)자본시장법(법률 제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의2호, 제29호, 제34의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4호,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자본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1호 다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5호 가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2호·제6호·제7호·제8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2항 제3호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 고시 제2019-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0.7.2.) 심의필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020.7.15.) 심의필

<별지>

케이비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 과태료 3,816.8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9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제29호, 제34의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7호,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제4-77조 제15호 가목, 제4-93조 제1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5호, 제29조 제2호·제6호·제7호·제8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 2. 조치사유

### 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총매매 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억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 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라.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 지점 및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p~최대 ◎%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마.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잔고 ●●●억원)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20xx.x.xx.~20xx.x.xx. 기간동안 ■억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운영 시스템 적용은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 등 △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을 책임자 승인없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운영시스템에 적용·등록하였고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은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② ■■■부는 20xx.x.xx. ○○서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 ③ ●●●부는 20xx.x.xx.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불철저

□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는 20xx.xx.xx.~20xx.x.xx. 기간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대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 ②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서 ◇◇◇ 단말기(▲대)로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 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는 20xx.x.x.~20xx.x.xx. 기간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제외)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동기간 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붙임1)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투자광고)**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보. 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2	6,000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3,000
부. 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2	3,000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함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생략)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파.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4,000

**부칙 <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는 제외한다.

-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

- 1.~4. (생략)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할 것
- 3.~5. (생략)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7.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부 칙<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I. (생략)**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생략)**

**2. (생략)**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III.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5. (생략)**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부칙 <2015.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망분리 적용 예외) ① (생략)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음

1. ~ 2. (생략)

3. 규정 제23조의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0. 7.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3,816.8백만원)
임직원	○ 감봉3월 1명 ○ 주의 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총매매 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억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별표22
-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 라.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 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 지점 및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p~최대 ◎%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가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 마.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잔고 ●●억원)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20xx.x.xx.~20xx.x.xx. 기간동안 ■억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49조 제1항 제34의2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4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 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운영 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 등 △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을 책임자 승인없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운영시스템에 적용·등록하였고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은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② ■■■부는 20xx.x.xx. ○○서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 ③ ●●부는 20xx.x.xx.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불철저

-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 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는 20xx.xx.xx.~20xx.x.xx. 기간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대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 ②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서 ◇◇◇ 단말기(▲대)로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5호, 제29조 제2호·제6호·제7호·제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 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① □□부는 20xx.x.x.~20xx.x.xx. 기간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제외)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동기간 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투자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811 02-2100-2697	02-3145-7015 02-3145-7429